

정책은 있고 정책검증은 없는 보도

1. 모니터 대상

- 경기일보, 경인일보

2. 모니터 기간

- 4월 24일(월)~4월 28일(금)

3. 모니터 의견

정책은 있고 정책검증은 없는 보도

이번 주 대선 보도 역시 지난 몇 주간의 보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공정성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보도는 자제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도는 후보자의 일정과 정책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보도 형태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는 각 언론들의 보도를 보며 '조금 더'라는 욕심이 더 생긴다. 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분석이다. 독자가 원하는 것은 보도자료 혹은 각 정당의 SNS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후보의 일정과 사진, 정책과 공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된 시대에 독자가 신문에 원하는 것은 보다 자세한 내용과 분석일 수밖에 없다.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석을 보도로 전해준다면 독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일보도 시작한 경기도의 의제 제시

4월 19일 경인일보에서 시작한 기획기사 [2017 경인 대선 어젠다]는 4월 28일 현재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분야별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일보 역시 4월 25일부터 기획기사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를 통해 경기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주의 두 기획기사에 대한 자세한 기사제목은 밑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난 몇 주간 두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경기도 홀대론' 혹은 '경기도에 맞춤 공약 후보 선택하자'와 같은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경기일보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25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1. 4차 산업혁명 - 최적의 입지 조건... 경제위기 극복 선도 가능 ; 북부선 일산 테크노밸리 주목 서부 광명·시흥 예산지원 필요 추진시 총 20만명 일자리 기대
26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2. 불공정거래 조정·조사권 부여 - 대기업·중기 '갑을 관계' 개선...지자체에 권한 이양해야 ; 공정위 담당

위의 사진(경기일보 24일 4면, 25일 4면 캡처) 이번 주의 경기일보의 경우 대선보도가 현재 지지율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기호 순) 대선후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고, 각 후보들의 유세와 정책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의 경우 기사제목과 중간 제목에서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심상정 후보의 경우 그 노출빈도가 유승민 후보보다도 낮았다. 또한 사진의 노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데 심지어 심상정 후보의 경우 24~28일 기간 동안 대선후보 토론회 때 찍은 단체 사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컷도 나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제목 오자 나온 경기일보, 잘못된 정보를 올린 경인일보

먼저 경기일보는 28일 문재인 후보의 인터뷰 기사<“촛불정신 계승 진짜 정권교체... 정의가 이기는 나라다운 나라”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중간 제목 중 ‘대탕평’을 ‘대평탕’으로 잘못 기입하는 실수를 범했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뷰 중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지역도, 계층도,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하는 협치의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 명백한 실수이다.



또한 경인일보는 27일 22면 사진기사 <“사과하라”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촉구 기습시위>를 통해 “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천군만만 국방안보 1천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장 앞에서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당일 기습시위를 진행한 단체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가 아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라는 것이다. 둘째 당일 기습시위 때 그들의 가장 큰 요구는 전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나온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한 사과였다는 점이다. 셋째,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은 ‘성소수자 차별반대금지법’이 아닌 ‘차별금지법’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칫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만 금지하는 법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기사가 연합뉴스의 기사 <기습시위 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를 인용하고 있는 기사이기는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면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과하라”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촉구 기습시위 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천군만마 국방안보 1천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장 앞에서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남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된 선거 보도를 확인해보면 이번 대선 보도는 많은 노력이 흔적이 보인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경마식 보도 형태나 네거티브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 혹은 좌우프레임 조장, 노골적인 특정후보지지 등의 문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제 남은 1주일.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초를 잘 지키며, 동시에 독자들에게 더 깊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바른 판단과 선택을 이끌 수 있는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3일
2017대선미디어감시연대 경기지역시민모니터단